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1.

방송통신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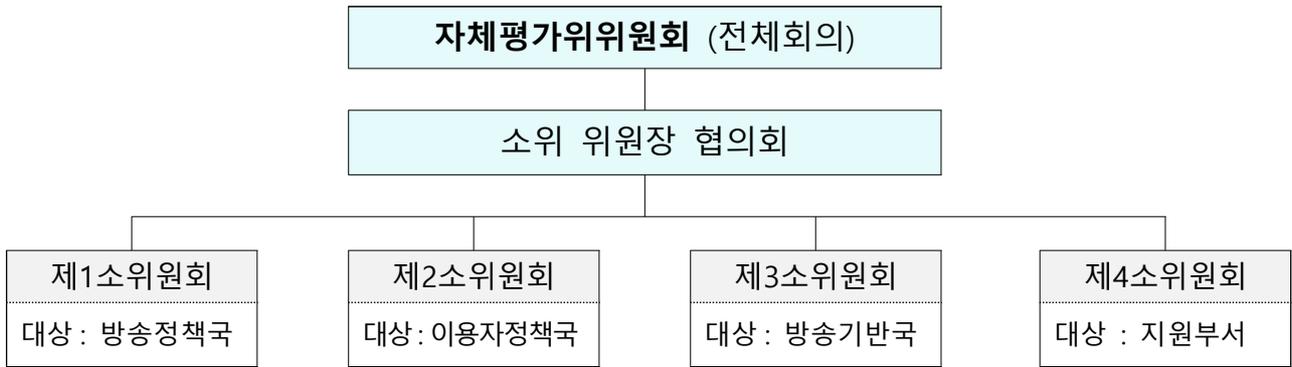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기준 반영) 국정과제, 주요정책 추진 등 변화된 정부 업무평가기준 반영
- (성과관리 강화) 정책부서 및 지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선정·관리하여 상위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환류 실효성 확보) 주요정책 관련 과제수행,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을 자체평가 시 가점 반영
 - 정책(환경)·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부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 운영 등에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조직(실·국) 단위별 소위원회를 조직, 소위원회별 정책추진 설명회 개최로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분야 3개 소위, 행정관리분야 1개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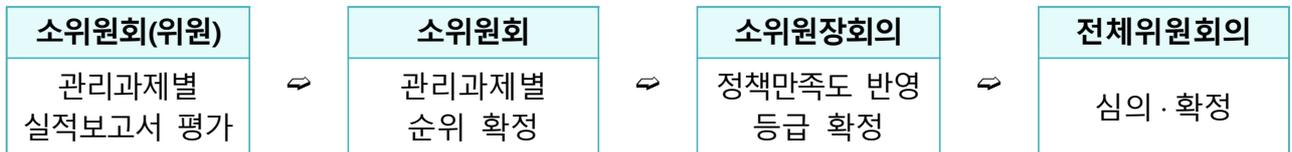
o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등

□ 평가방법

- o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정책·지원부서)별 평정 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 o 절차 : 정책부서(1·2·3소위)와 지원부서(4소위)를 나누어 평가하고, 소위원장 회의를 통해 평가등급 및 순위 조정

< 자체평가 절차 >



- (소위원회) 관리과제 추진부서로부터 추진실적 등 설명하도록 한 후 위원별 평가 '순위'를 집계하여 소위원회별 '평가순위' 확정

- (소위원장 회의) 정책부서(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의 17개 과제에 정책만족도를 반영한 최종 '등급 및 순위' 확정

< 평가등급 범위 >

순위 누적	등급	정책부서(17개 과제)	지원부서(7개 과제)
~ 상위 5%이내	1등급 (매우 우수)	1개 과제	1개 과제
5%초과 ~ 20%이내	2등급 (우수)	3개 과제	1개 과제
20%초과 ~ 35%이내	3등급 (다소 우수)	2개 과제	1개 과제
35%초과 ~ 65%이내	4등급 (보통)	5개 과제	1개 과제
65%초과 ~ 80%이내	5등급 (다소 미흡)	3개 과제	1개 과제
80%초과 ~ 95%이내	6등급 (미흡)	2개 과제	1개 과제
95%초과 ~	7등급 (부진)	1개 과제	1개 과제

- (이의신청·확인절차) 자체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등급(안)을 담당과에 통보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 (전체회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확정

< 자체평가 추진일정 >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22.11.15.~11.16.	소위별 평가	과제수행 부서의 추진실적 설명 및 평가
12.20.	목표달성도 반영	11월초 기준 → 12월말 기준
'22.12.22	소위원장 회의	평가 순위 및 등급 결정
'23.1.20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의결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국무조정실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정책부서 17개, 지원부서 7개 등 총 24개 과제
- 평가지표 : 4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지원부서는 8개 평가지표) 구성

<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계획수립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 사례 조사 여부 및 전년도 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가 과제 전반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과정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 정책단계별로 정책고객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실적 및 정책반영 정도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상황변화(국회 / 언론지적 등)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극성	• 성과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정책실행 후 정책 만족도(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4개 항목	정책부서 9개 평가지표, 지원부서 8개 평가지표	
가점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1), 정부업무평가결과(+1),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1),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통합재정사업평가 포함)(+1)	

※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책부서에 한함

2. 평가결과

(1) 총 평

□ '22년도 총 26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정책부서 17개, 지원부서 7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정책부서는 매우우수 1개(6%), 우수 3개(18%), 다소 우수 2개(11%), 보통 5개(29%), 다소 미흡 3개(18%), 미흡 2개(11%), 부진 1개(6%) 과제
 - 우수 이상 과제는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등인 것으로 평가
- 지원부서는 매우우수 1개(14.3%), 우수 1개(14.3%), 다소 우수 1개(14.3%), 보통 1개(14.3%), 다소 미흡 1개(14.3%), 미흡 1개(14.3%), 부진 1개(14.3%)과제
 - 우수 이상 과제는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정가치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임

< 평정등급 분포기준 >

등급	정책부서(17개 과제)	지원부서(7개 과제)
1등급	1개 과제	1개 과제
2등급	3개 과제	1개 과제
3등급	2개 과제	1개 과제
4등급	5개 과제	1개 과제
5등급	3개 과제	1개 과제
6등급	2개 과제	1개 과제
7등급	1개 과제	1개 과제

□ 총 24개 관리과제의 3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75%

-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계산
 - 성과계획상 2개의 성과지표(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는 2월 중 산출 예정으로 달성률 산정에서 우선 제외

○ 3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 (정책홍보 활성화율)는 미달성

○ 성과목표 미달성* 주요인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수립 지연에 따른 홍보 부족이 주원인으로 판단

*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지표 중 정책홍보 활성화율은 목표 100% 대비 90.1% 달성

- 향후 주요정책 보도·설명자료 등 배포 확대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주요성과

□ 정책부서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등 4개 과제는 우수(1~2등급)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과학기지 등의 해안 관측용 CCTV 화면을 KBS 등 23개 방송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6월 ~ 10월)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국회 계류 중)

- 재난 자막방송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방송사 자율 실시 유도

- 코로나 19를 비롯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정규뉴스, 특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서 방송하도록 조치

○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사실조사로 EBS 등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행위로 인한 시청자 피해 예방

- TV조선-SKB간, 사회안전방송-HCN간 방송프로그램 송신료 관련 분쟁 조정 및 안 제시

- 유료방송 가입·변경·재약정 시 가입정보 문자고지를 전체 유료방송사(17개사)로 확대 적용
- 지상파·종편PP 등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현황 분석·공표 및 조치방안 마련(9. 28.)
-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및 해당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실시(8월~)
 - 결합상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시정조치,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유통점 교육 등 추진
 -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MSO로 확대 시행, 인터넷서비스 독점계약 건물 입주민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 감면 추진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해지절차 점검 및 앱내 해지기능 개선 권고(1월)
 - 배너광고 등을 통한 통신사 제휴 유료부가서비스 시정권고 및 가입·해지절차 개선(7월)
 -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모니터링 및 행정 지도 실시
 -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구제 손해배상 기준 확대(6→10배)하고 기준시간을 단축(3→2시간)하는 등 통신사 책임 강화 및 재발방지 유도
- 지원부서의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등 2개 과제는 우수(1~2등급)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마련으로 정보보호 수준 제고, 주요 방송사 보안관리 실태 점검으로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관리 강화 유도
 - 화재발생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전 직원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소방 전문가교육 실시
-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새로운 국정과제 수립 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점검 실시
 - 미디어 분야 선제적 규제 개혁,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 감축 등 이행
 - 불합리한 규제와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 정부혁신 추진
 -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갈등관리 과제(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발기금 지원기관 소관 불일치 해소 등) 선정 및 해소 노력

(3) 개선·보완 사항

-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등 4개 과제는 미흡(7등급)한 것으로 평가
 - 미흡 평가 주요사유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관련, 허가조건 이행 여부 점검 외 사업자 자율이행 유도 부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노력 미흡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효과 측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 세대교체를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미흡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3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점검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 정책부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1등급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2등급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3등급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4등급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5등급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6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7등급

□ 지원부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1등급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2등급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3등급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4등급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5등급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6등급
국정가치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7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I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정책부서)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 방송통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반을 운영하여 관련 주요 쟁점 논의 및 구체적 법조문 검토를 수행하고, 토론회·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학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이를 거쳐 OTT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미디어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법제(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

-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반을 통해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공개토론회, 실무협의(KBS, EBS),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협약의 체결, 협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 등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 마련

○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제도 개선

- 방송·미디어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관련 정책연구 실시
- 이를 통해 대기업 기준, 지상파간 및 지상파·유료방송 겸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법제의 전면적 개편은 이해관계자, 인접시장 및 시청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견수렴 등 정책소통을 지속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자료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을 성과 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법 정비 추진을,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을, 소유겸영 규제 개선 추진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1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관련 연구반 운영 및 방송사,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학회·연구기관과의 토론회·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법안 및 정책을 마련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적·합리적 규율체계 도입, 새로운 방송제도 설계, 소유겸영 규제 개선 검토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목표치를 달성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 경쟁 심화, 기존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	2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법제의 전면적 개편 및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영방송의 역할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디어 품질 제고 및 시청자 편익 증진 기반을 마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71		
계(100점)			85.71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가치 성과
합계(100점)			87.7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 배움의 현장에 방문하여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유아 50개 기관, 청소년 389개교, 성인 640개 강좌 등)으로 교육 참여인원* 지속 확대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
- * 미디어교육 참여인원 : ('20년) 40.2만 명 → ('21년) 41.1만 명 → ('22년) 42.3만 명(예정)
- ** '22년 미디어교육 수강 전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 (前) 75.6점 → (後) 80점
- (디지털 격차없는 평생교육) 디지털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도 빠짐없이 특성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 찾아가는 교육 제공(135개 기관) 및 맞춤형 교안 개발(3종)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디어 인프라 확대) 온·오프라인 기반 미디어 인프라 확충으로 미디어 접근이 어려웠던 소외지역·계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 구축(6대, 9월) 및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 앱 서비스 개시(5월)
-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조사, 강사 양성·연수, 관련 연구 추진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미디어 참여행사 개최) 청소년, 장애인, 섬마을 지역민 등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험·공모전 등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장애인 미디어 축제(10월), 섬마을 미디어 페스티벌(11월)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디어교육 체계화 및 전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안 개발 등 미디어교육 체계화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미디어교육 현황 및 제언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 '미디어교육 이수율'은 미디어교육 수혜자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복합지표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8개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 미디어교육 교안 개발 시 교사 및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미디어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운영방안 수립 시 활용 ■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의 앱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구축하는 등 교육 환경 및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센터 이용자 수', '미디어교육 이수율'과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 '센터 이용자 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이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되나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체계화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 및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8		
계(100점)			80.28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83.28	

(1) 평과결과

□ 주요성과

- (지역밀착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5억원 증액)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 선정·지원(36억원)

- 지역밀착형 뉴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하고, OTT·AR·VR 등 신유형 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협업 추진(5개 방송사 6개 프로그램)

- 지역특화 콘텐츠 공동기획·제작 및 예산 확대 등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권역별 지역방송 대표자 간담회 개최*

* 광주·전라(6.10), 부산·경남(6.23), 대전·충청(7.21), 강원(8.18), 대구·경북(8.26), 제주(9.22)

- (신규미디어 대응 강화) 미디어 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 종사자 교육 지원 및 OTT 플랫폼 서비스 확대

-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지원(MBC충북, KNN 등 11개사 12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촬영 등 신규미디어 맞춤형 교육 지원

- 왓챗(89개), 웨이브(35개), 네이버TV(5개)등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청자 점점 확대 및 신규 수익구조 마련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확대 등 지속 지원 및 관련 예산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 지역·중소방송 대상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 '프로그램 시청취자 만족도'와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지표는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1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함 ■ 사업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권역별 지역방송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정책 건의 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검토 등 정책 반응을 위해 노력함 ■ 지역뉴스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규미디어 관련 종사자 교육 및 OTT 서비스 확대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취자 만족도' 및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에 대한 목표치를 100% 달성함 ■ '시청취자 만족도'는 만족도 결과의 한계치 및 조사 대상 프로그램이 매년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향 설정하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의 경우 신규 지표로 최근 3개년 마켓 출품 평균 증기량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유통활성화 지원 및 지역 협력 체계 강화 등 지역방송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5.02		
계(100점)			82.02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85.0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방송 강화) 급증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에 대응하여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운영('21.11월~)하여 24시간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 실시
- (재난방송 협력강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지 및 해안 관측용 CCTV 공유·활용을 추진하여 KBS 등 23개 방송사에서 활용하도록 추진 완료(6~10월)
-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강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추진(~12.31, 국회제출)
- (재난 자막방송 가독성 제고) 재난 자막방송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기준(안) 마련하여 방송사 자율 실시 적극 유도
- (다양한 유형의 재난방송 실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정규뉴스, 특보, 국민행동요령 등 방송
- (방송재난 대응)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으로 방송재난과 방송서비스 피해 예방
- (코로나19 대응) 주요 방송사에 대한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분야별 업무 연속성계획(BCP) 마련(1.28) 및 방송사 등 현장 방역점검 실시(총21회)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등 관련 보고서 자료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취약계층 재난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사 재교육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적절하다 판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추진계획 대비 12개 완료하였고, 4개 진행 중으로 차질없이 완료 예정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추진 ■ 현장화면 위주에 생생한 재난방송 제공을 위해 지역방송·지자체 재난 방송 협력 강화 추진 ■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태풍 '힌남노' 대비 기관장 주재 재난 방송 준비 현황 점검 회의 실시 ■ 음성인식을 이용한 재난방송 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기능' 강화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 92%(목표 80.4%)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수어재난방송 확대를 통한 TV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수요를 대비하고, 중요 방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상황지표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	2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실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재난 방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재난방송 대응 체계 마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08		
계(100점)			95.08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7.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방송사의 원활한 공적책무 이행 유도

- 지상파방송사별 (재)허가조건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자의 이행을 독려한 결과, 높은 수준의 허가조건 이행률*을 달성

* (재)허가조건 총 458건 중 445건 이행으로 97.2% 이행률

○ 엄격한 허가 심사 및 이행점검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 (지상파라디오사업자 신규허가) 경기지역의 청취권 회복 및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실현,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완료
- (허가조건 이행점검) 협찬 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종료 시점 포함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 방송사 홈페이지에 7일 이내 게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12월)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동체라디오 개국 지원) '21년 선정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개국 지원(법인설립, 준공검사, 변경허가 등)을 통해 6개 방송국이 개국하여 지역 미디어 활성화에 기여('21.12~'22.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허가조건 이행 점검 외 사업자 자율이행 유도방안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영·민영방송사의 지위 및 매체 특수성, 변화되는 방송환경 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 허가 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경영환경 및 과년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반영,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현황은 '재허가' 심사를 통해 평가받고, 공적책무 관련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동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표로서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전체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함(10개중 10개 완료) ■ 사업자 설명회 개최, 시청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국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정책수립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함 ■ 국회·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재허가 심사에 충실히 반영, 후속 보도자료 등 대응의 적절성 확인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 협업 노력도(15)	12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 달성 ■ 방송사 경영여건의 악화로 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재허가시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가한 점, 사업자의 자발적 조건 이행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2	16.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확보, 지역방송사의 경영여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시 대응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 ■ 재허가 심사결과로 재허가조건 및 권고 사항 등을 부가하여 시청자 편익 증진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83		
계(100점)			73.83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76.8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방송사 재승인 조건의 이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기('23년~'25년) 재승인 심사계획 마련 추진
 -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단 구성·운영 및 방송사 현장실사와 관계자 면담,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점검 실시
- 조건 및 권고사항 미이행한 방송사에 시정명령 및 이행 촉구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재승인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 노력을 유도
-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21.12.), '23~'24년도 공익채널 선정 심사계획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22.11.21~11.23.)
 - *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들의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예비채널 제도를 도입하여 선정 기회 확대
 - '23~'24년 공익채널 11개 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채널 인정('22.12.7.)
-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 중점 심사, 유료방송사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 동의(남인천방송(주) 등 총 20개사)
 -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사업자 부담 완화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허가조건 개선방안 논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송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 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 승인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종편·보도PP 등 공적채무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 ■ 과제내용 및 목표에 부합하는 신규 성과지표를 발굴 및 적용,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구체적이고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에 적절히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추진계획 대비 7개 완료(100%) ■ 재승인 관련, 방송사 이행실적 점검 시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단 운영 및 현장실사,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 ■ 공익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요구 사항, 기타 애로·건의사항 등 공익채널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 ■ 사전동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허가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 재승인 관련, 콘텐츠 투자 실적 인정 범위 합리화 등 이행점검 기준 개선 등 노력 ■ 사전동의 관련, 행정기본법 신규 제정에 따라, 동법에 부합하도록 허가조건을 개선하는 방안 논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률 등 100% 달성 ■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등 이행률 100% 달성 ■ 사전동의 관련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 100% 달성 ■ (재승인 관련) 전년도 목표치(90%) 대비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치(92%)를 설정 ■ (공익채널 관련)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3~'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최종 선정 필요 - 따라서, 공익채널 관련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100%)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상생환경 조성 등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7)	4.59		
계(100점)			88.59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91.5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를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2.7월~) 구성·운영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 시범운영 중
- 포털 뉴스·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등 정책 방안 논의를 위한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5~12월, 5회)
-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 논의를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구성·운영(1~12월, 7회)
- 신속한 통신분쟁조정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 수 증원, 사무국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8)
- 해마다 폭증하는 통신분쟁조정 및 상담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불편해소에 기여
 - ※ 분쟁조정신청 : '19년 155건 → '20년 572건 → '21년 1,170건 → '22년 1,006건(12.20)
 - ※ 분쟁조정상담 : '19년 6,689건 → '20년 11,041건 → '21년 10,080건 → '22년 9,498건(12.20)
- 온라인 서비스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 365센터」(5.31. 개소), 대국민 포털 및 지원시스템(www.helpos.kr)을 구축·운영하여 인터넷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지원
- 카카오 장애 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긴급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대응, 카카오에 피해사례 이첩 완료(10.17~11.8)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메타버스 등 신유형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패러다임 등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 제고 및 대국민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비 방안 모색 ■ 통신분쟁 피해사례 분석, 온라인피해 365센터 구축·운영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 제고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정책협의체, 민관협의회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시 관계부처,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원 애로사항 청취 및 이용자 피해 대응 점검 등을 위해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현장방문 ■ 품질측정 항목 표준화를 위한 통신4사의견청취('22.4월, 5월), 통신품질 현장 검증 실시('22.6월~, 15회 실시)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 변화에 따라 범부처 협력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 카카오 장애 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긴급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대응, 카카오에 피해사례 이첩 완료('22.11월)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통신·인터넷 정책개선 건수는 총 3건으로 목표치(3건) 달성 ■ '22년 12월말 분쟁조정 해결률 측정예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신분쟁사건 신속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성과지표로 판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민관협의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불편해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1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22.12.20기준), 통신분쟁조정신청건수 1,006건, 통신분쟁조정상담건수 9,498건('22.12.20. 기준)
	9. 정책성도에 대한 만족도(7)	5.56		
계(100점)			87.56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89.5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앱마켓사 규제 도입 및 금지행위 대응)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22.3.15 시행)으로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앱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5~8월) 및 사실조사(8월~) 진행
- (통신시장 조사·점검 강화)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6월)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유통점 대상 교육 진행
- (통신시장 제도개선 추진)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사업자(MSO)까지 확대 시행(9.5)하고,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4월)
- (부가통신시장 점검)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으로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9~12월)하고, 앱마켓 및 플랫폼 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통신시장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동향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파악 등 충실한 계획 수립 ■ 성과지표는 결합판매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행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법령 준수율로 반영하여 대표성 강화 ■ 계량화된 월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 기준과 수단 명확성 제고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추진일정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해 1건 진행 중 ■ 앱 마켓사 현장점검 면담, 경품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의견수렴 등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법 개정 이후 앱 마켓사가 결제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 ■ 이해관계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를 달성 ■ 온라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찾아내어 목표치 상향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점검·조사·제재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63		
계(100점)			92.63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4.6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이통시장 경쟁활성화 유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 확대(현행 15% → 30%) 추진 및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이용자 편익 확대 추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를 개선하고*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편하여 편익정보 제공 강화 및 가독성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 * 이용자 고지 강화, 중고폰 최소보상율·보상적용 단말기종 확대, 보상기준 개선 등
 - ‘휴대폰 데이터 유출 민관 자율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 추진
-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온라인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상시시장 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적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신유형의 불공정행위 대응)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온라인 불법 정보 유통 관련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알뜰폰 시장 공정 경쟁 연구반을 운영하여 개선방안 논의

□ 미흡 원인 분석 결과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지표에 시장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활동 활성화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추가지원금을 상향(現 15% => 改 30%)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정부안) 입법이 여야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법안소위 전 국회 과방위 소 의원 대상 설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유통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사실 조사, 제도개선 등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지원금 지급 수준 모니터링 실시 및 온라인 상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과 알뜰폰 시장 분석 등 수행 ■ 기존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 단일 지표에서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시적 조사 수행과 단말기유통 환경과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한 성과 지표 마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추진계획 모두 실시 완료하였고, 2개의 업무 추가(1개 완료 1개 진행 중) ■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제재 및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 ■ 이통사-유통협회 간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알뜰폰 경품시장 건전화 방안, 법인영업 약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민원 신고 유통점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 → 상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실시 ■ 온라인 상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등 위반행위 발생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불법유통정보 제재 방안 논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및 정책제도개선 및 상시조사 실시 건수 목표치 달성 완료 ■ 비대면 경제 확산 속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지표와 함께 단말기시장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 제도건수와 상시조사 실시건수를 새롭게 지표 반영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	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유통법 법령 개정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사항 제도화 ■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즉각 대응으로 유통시장 건전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09		
계(100점)			79.09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81.0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를 통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유도
 -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후 애플 및 앱개발사에게 앱내 해지기능 마련하도록 개선권고(“22.1.5)
 -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결제되는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후 시정권고 및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절차 개선(“22.7.6)
 - (플로팅광고 행정지도)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후 행정지도 실시(“22.7.7)
-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강화방안 마련
 - (통신장애 피해구제 강화)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22.7.31)
 - ※ 손해배상(6→10배) 확대 및 기준시간 단축(3→2시간)
 -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등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22.10.15~)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제고와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환경분석, 공정위·소비자원 등 유사 사례 조사, 해외동향 파악 등 사전조사를 충실히 시행 ■ 1년간 논의해야할 과제를 선정하고, 현황 분석·의견수렴·정책안 마련 등의 계획을 균형있게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과제 모두 완료하여 계획을 준수함 ■ 간담회(수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해 시민 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론화의 장 마련 ■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별도 연구반 운영 등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법령 제정 등 추진 ■ 이해관계자마다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 협업 노력도(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은 18.2%로 목표치를 능가하여 달성 ■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율 목표치를 '21년 (17.5%) 대비 0.5% 상향한 18%로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제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 ■ 정보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및 데이터 소모량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통신비 절감 유도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83		
계(100점)			91.83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3.8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법스팸·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서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을 위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월) 마련* 및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월) 후속조치** 이행
 - * 문자중계사의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체계 마련, 스팸 신고 기능 개선 등
 - ** 불법스팸 전송자 전화회선 가입제한 및 이용정지 강화를 위한 약관개정(10월~) 및 법적의무 해태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11월)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환경변화에 맞게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활성화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23년초 입법 예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 강화
 - * 사업자 구분 통합(위치정보사업) 및 진입규제 완화(신고제), 방발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 점검('21년 약300개→'22년 약1,300개사업자)
- (본인확인 제도개선) 본인확인기관이 지정*을 다양화하고, 안전한 연계정보 활용을 통한 신규 혁신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 '22년 4개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 완료(10월, 국민·하나·신한은행, 카카오뱅크)
 -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완료(1월), 연계정보(C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5월)
- (디지털윤리문화 조성) 명예훼손, 디지털폭력 등 최근 증가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해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23년 35만) 및 대국민 캠페인 추진
 -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조나단, 도티 등)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디지털윤리주간 및 윤리대전 개최(12.2) 등 추진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문자중계사(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량이 증가하여, 문자중계사 등 대상 현장점검 및 규제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추진 필요
 - ※ 문자중계사의 책임강화(과태료 1천 → 5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완료(11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였음 ■ 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표로 적절 *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위치정보 사업 지원 만족도',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29개의 추진사항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음 ■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기업, 학계)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기관장 부기관장 등 관리자급의 현장점검 및 소통을 지속하였으며,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노력함 ■ 위치정보 규제진입 완화를 추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외부지적사항에 적절히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중 인터넷 윤리교육 만족도 측정 및 사업수행의 적시성 확보에 대한 지난해 지적에 따라 계획을 적극 수립하였으며 올해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도가 충족 ■ 위치정보, 불법스팸(하향지표), 본인확인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시대의 국민불편 최소화하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위치정보 규제완화, 불법스팸 감소 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에 기여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52		
계(100점)			83.52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86.5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91개 사업자)
-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실무급 9월, 고위급 12월 개최)
- (디지털성범죄물 신속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 신속심의·차단 실시(연중)
-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기여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자 확대 : ('21년) 135개 → ('22년) 141개
- (사이버 역기능 대응)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역기능 예방 증진대응
- (팩트체크 시민교육) 중·고교 연계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노인 복지관 연계 시니어 정보판별 교육 등 맞춤형 시민 교육 실시
 - * 총 수강생 1,331명, 11월말 기준
- (팩트체크 활성화 및 홍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 체크넷')을 활성화하고,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통한 팩트체크 기반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활동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계량지표 보완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에 대해서도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불법 음란물 유통량 조사,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사전조사 등 통계분석 및 사전조사 충실히 수행 ■ 불법촬영물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뚜렷한 지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추진계획 추진 완료 ■ 팩트체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팩트체크 사업의 외부 평가에 대한 자문 실시 및 적극 반영(4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5개 부처) ■ 불법촬영물등 관련 토론회 개최하여 정책실시 이후 시행현황 점검 ■ 청소년보호SW 서비스 개선 시 이용자 협의회(보호자, 청소년, 전문가) 제안 사항 적극 반영(14건, 100%)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차단비율 목표대비 111% 달성(17만 건 이상)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97.5% 달성 등 목표치 상회 ■ 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의 성능 개선 지원을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목표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3	18.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책임자 확대, 개인방송 출연 아동 보호 지침 마련하여 인터넷역기능예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시행(91개)을 통한 성범죄물 확산 예방 ■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68회), 팩트체크 콘텐츠 언론보도 연계(방송사)를 통한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7		
계(100점)			77.37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80.3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상향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특히, 이태원 사고 관련 잔혹 혐오 영상 등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10.31.)
 - * 이태원 사고 관련 심의 요청 민원 350건 접수(방송 103, 통신 247) 및 방송심의 20건(권고3, 의견제시2, 문제없음15), 통신심의 949건 처리(삭제725, 접속차단224) (12.16기준)
- (방송의 품격 제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 고지 등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추진(63개 채널, 26,276회 송출)
- (우수 프로그램 시상)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등 사회·문화발전, 한류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22.6월, 15점)을 통해 방송 제작인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보편적 시청권 개선)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언론·문화·시청자·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개최(4회)하여 제도개선 등 논의
 -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임기 만료로 제8기 위원을 신규 위촉('22.10.4, 임기 : '22.10.8~'24.10.7)하고, 제8기 보편위 1차 회의('22.11.22) 및 2차 회의('22.12.20.)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현황과 주요이슈 및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논의,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 여부' 심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 노력 및 효과 측정 성과지표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국민관심행사의 종류 확대'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무를 OTT 등 온라인 중계에 확대 적용'하는 사안은
 - 국민적 인식 및 사업자 부담, 국내 방송미디어산업 경쟁력 및 미디어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개정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평가 및 기존 평가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음 ■ 방송품질 개선 노력, 심의활동, 민원 대응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체적 지표 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2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및 완료함 ■ 국민관심행사 고시 관련, 관계부처 및 방송사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함 ■ 이태원 사고 관련 방송통신 심의규정 위반 정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1월 말 집계 예정임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	2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 시, 국민심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0		
계(100점)			82.30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84.3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방송 확대*를 위해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

- 필수지정·고시의무 사업자 대상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91개사),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400편)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38편) 제작·보급

- 지상파·중편PP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확대를 통해 웹·앱에서 장애인방송 제공

※ ('20) KBS·MBC·SBS → ('21) KBS·MBC·SBS·EBS → ('22) KBS·MBC·SBS·EBS·JTBC·TV조선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 하고('22년 15,300대),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장애인방송 특화기능을 탑재 하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방송시청 편의 보장

- 음성인식 기반 자막·아바타수어 자동 변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청각장애인의 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활용도 제고

- 장애인방송 홍보영상 제작·송출 및 배리어프리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 및 참여 유도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과제별 계획 수립, 장애인 단체·사업자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등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 시각·청각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성과물로 성과 지표 설정이 적절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3개 추진계획 대비 100% 완료하여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장애인단체 및 방송사업자, TV 보급 사업자 등 간담회 개최,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및 현장방문(목포, 부산)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음 ■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 및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소외 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5월)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목표치 (94.5점) 100% 달성 ■ 수요자(시각·청각장애인)와 공급자(방송 사업자)의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적극 추진하였음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을 TV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방송사 확대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9		
계(100점)			90.39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2.3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로 시청자 피해 예방
 - 보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21.4~9월) 및 사실조사 착수("21.9.30.), EBS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2.23), (주)티비씨 등 20개 방송사 사실조사 결과보고(6.2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결(11.16)
-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수급 및 대가 관련 분쟁 조정
 - TV조선-SKB(3월) 간 PP사용료 인상 관련 및 사회안전방송-HCN(7월)간 채널 편성 제외 관련 분쟁 조정안 제시
-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
 - 유료방송 가입·변경·재약정 시 이용자에게 가입정보를 문자로 고지 하는 개선방안을 전체 유료방송사(17개사)로 확대 적용(3.17)
- 지상파·종편PP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현황 분석·공표 및 조치방안 마련(9.28)
- 홈쇼핑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12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부재로 관련 서식 등 조정절차에 대한 규칙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상황 파악 및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20년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으로 성과지표를 불공정행위 개선실적 건수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인식도로 선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0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협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방송 가입·변경·재약정 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의도치 않은 가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 정보를 문자로 고지하는 개선방안을 전체 유료방송사로 확대 적용 ■ 방송시장 조사 정책 추진 시 외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만족도가 전년대비(69.98점) 대비 4.9% 상승하여 73.55으로 103.6% 달성 ■ 열악한 방송시장 환경속에서도 개선만족도를 최근 2개년 평균치(69.7%)를 기본으로 하되, 목표설정의 적극성을 반영하여 1.3%를 추가한 71%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분쟁조정 및 대가산정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이 적정 대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9. 정책성공에 대한 만족도(7)	5.25		
계(100점)			94.25	
가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5.2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열거된 7가지* 광고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추진
 -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협의체」 운영(6월~11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방안 마련
- 지상파·중편PP 대상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7월, 12월) 및 재검토 기한('22.7.16.) 도래에 따른 가이드라인 검토* 완료(7월)
 - * 외주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년간 재연장
-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관행 실태 조사 실시(7~12월, 문체부 공동)
- 방송의 편성 자율성 확보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 편성규제 개선방안* 마련('22.12월)
 - * 오락 프로그램 상한 완화, 순수외주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 개선 등
-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11.16.),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등 추진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ESG 경영 수행에 대한 평가 항목 신설('22.12월)
 - * 방송평가 규칙에 환경 경영 노력, ESG 보고서 이사회 보고 등 평가 항목 추가
-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방안 마련('22.12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실시 ■ 방송사업자의 편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편성규제 개선 이슈 발굴에 활용 ■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 이해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 측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 중으로 '23년 개정안 마련 예정 ■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편성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12차례 회의를 통해 수렴 (방송사 10회, 전문가협회 2회) ■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 관행을 문체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평가 대상·항목·결과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3회) 및 사업자 의견수렴(1회)을 거쳐 공적채널 평가방안 마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85.2점으로 당초 목표(85점)의 100.2% 달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회의 개최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전년보다 더 높은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 도모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평가에 공영방송의 ESG 경영 수행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지원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3		
계(100점)			86.23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88.2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1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중소기업(44개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평균 12.9%, 7.7% 증가하여 방송광고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 (소상공인 성장 견인) '21년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136개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평균 31%, 2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도약·재기에 도움
- (중소기업 지원으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21년 지원 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로 11.6억원을 지원하였으나
 - 기업에서 투자한 광고제작비·광고송출료 등에 따른 매출은 108억원으로 지원규모의 9배를 상회하는 효과 유발
- (소상공인 지원으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21년 지원 소상공인(136개사)의 97.8%가 '제작비 및 송출비 지원이 없었다면 방송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새로운 지역방송 광고시장 수요를 창출
 - 지원 소상공인 중 '22년에도 방송광고 집행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62.5%(85개사)로 지역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예산, 조직 등) 확대 노력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내수경제 여건과 국회 등의 방송광고 지원 확대 요구에 부응,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견 및 사업효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적절히 수립 ■ '지원 기업의 성장'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두 가지 측면의 정책목표를 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표 구성 ■ 방송광고를 활용한 지원기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향상 정도, 방송광고 집행규모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계획서상 6개 추진계획 대비 5개 완료, 1개 정상 추진 ■ 기업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부서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사업안내 동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등 사업방식 개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방송광고 시장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기재부, 국회 등에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및 '23년 예산증액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 하는 등 적극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1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케팅 여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 ■ 본 성과지표는 국내경기 등 외생변수와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 매출악화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	1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기업성장에 기여 ■ 방송광고 지원규모의 9배를 상회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효과 유발 및 방송광고 시장의 신규 수요 창출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13		
계(100점)			76.13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79.13	

Ⅱ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지원부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추진)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라 공약 및 국정 기초를 반영한 새로운 방통위 국정과제 수립을 지원하고, 수립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관리·점검
 -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공영방송 ESG 도입을 위한 방송평가 규칙 개정 등 국정과제 내 세부 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
- (주요 정책과제 수립)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연두 업무계획과 새 정부 업무계획('22.8월)을 수립하고, 핵심과제 세부정책들을 적극 추진
 - 새 정부 기초에 따른 공통과제로서 미디어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법정위원회 감축 등을 집중 이행
- (정부혁신 선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2022년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 등 정책 추진과제 이행하고, '정부혁신 콘서트'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
- (갈등관리 추진) 방통위 자체 갈등관리 과제*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갈등 해소에 주력
 - * △망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방송 통신발전기금 지원기관 소관기관 불일치 해소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국정과제를 반영한 주요정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 관리·점검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지속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사례분석을 통해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 성과지표는 방통위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 이행을 모두 반영하는 지표로서 적절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5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계획한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전체 계획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 ■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시 현장방문, 미디어·ICT 간담회 등을 지원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 ■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과제 기존 실적을 관리함과 동시에 중장기 추진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꼼꼼하게 대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5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와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전체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 모두 100%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목표의식을 보임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정책 추진 및 다양한 정부혁신 사례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국민 권익 강화에 기여
계(100점)			92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주요정책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통해 관리기관의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주요 방송사의 보안관리 실태 미비점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중요 정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관리 강화
- 보안감사와 방호실태 점검이 중복되는 방송시설에 대한 통합감사(상·하반기, KBS 등 23개 방송사 및 송신소)를 통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안 및 방호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
- '17년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을지연습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기관장 중심의 을지연습 실시 및 37개 중점관리대상업체 참여하여 전시 대비 태세 강화
-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안전한국훈련(토론훈련·현장훈련)을 통해, 소방·경찰·지자체·주요 방송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대규모 재난대비 방송분야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
- 화재 발생, 생명 구조 상황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소방 전문가교육을 통해 방통위 전 직원의 재난대응역량 제고
- 방통위 정보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22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직원 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성과로 을지연습 및 총무계획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비상대비계획에 적절히 반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을 강화하여 '정보보호 수준율'의 목표치를 '21년 대비 1.2% 상승 ■ 객관성이 담보된 측정지표를 성과 지표로 사용한 점은 적정하나 자체 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및 이를 통한 성과측정도 필요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개의 자체 추진계획상에 따라 동원자원조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수립 등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 안전훈련, 을지연습,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등 실무자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적절히 수행 ■ 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대비 통합대응체계(안전한국 훈련)를 점검 ■ 화재 발생, 생명 구조 상황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소방 전문가교육(상,하반기 2회)을 통해 방통위 전 직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임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 100%로 달성 ■ 전년실적 대비 대폭 상회하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정보보호 수준율 1.2p 상승)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감사, 을지태극연습, 가짜뉴스 대응과 중대본 회의 상시지원 등 사회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계(100점)			94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9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규제혁신TF 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전사적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원활한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2.5.31.)
- (규제개혁 의견수렴) 방송통신 분야 49개 업계, 협·단체 및 기관 대상으로 규제개혁 의견수렴 진행('22.6.28 ~ 7.11.)하여 선정된 과제 개선 추진
 - ※ 지상파 재허가 제도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평가제도 개선 등
- (신산업 활성화) 혁신적인 ICT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 신청을 수용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신기술의 상용화 등 신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

구분	과제명	개선내용
임시 허가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민간기관의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 (사업자 부담 완화) 법령 정비를 통하여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추진

법령	과제명	개선내용
위치 정보법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업 허용요건 및 진입 규제 절차 간소화(위치정보법 시행령 '22.4월 개정완료)
본인확인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부담 완화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방식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하여 사업자 편의 개선 (본인확인기관 고시 '22.2월 개정완료)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내실있는 규제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져 심사 위원-정책담당자 간 충실한 정책 설명과 이해를 위한 노력 및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준수하여 기관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의 세부계획 수립을 충실히 이행 ■ 기존규제정비과제 이행률은 방통위의 규제개선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 과제이며, 기관 대내외적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달성되었음 ■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샌드박스 운영 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규제개선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규제심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위-사업담당자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 100% 달성 ■ 이해관계자나 다수부처 관련성 등 추진 난이도가 높음에도 성과지표 목표치 100%로 유지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특례를 적용하여 공동체 발전 기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 ■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신기술 상용화 등 신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
계(100점)			89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가치 교육)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이수를 독려하여 국정가치 및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
- (일·삶 균형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출퇴근 시간 절감 등 다양화된 근무 형태 제공 및 구성원 역할 인식전환노력*을 통해 일·삶이 균형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업무 능력으로 연결

*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을 지표 △ 연가·유연근무 활성화 추진계획(7월) △근무혁신방안(9월) 수립 시행을 통한 참여 및 활용성과 공유

-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 및 부서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재택근무, 연가 적극 활용을 통한 업무 기능성 유지 및 방역 간 균형
- (적극행정 추진 활성화) 방송·통신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총 21개 적극행정 과제 선정
 - ※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국민 미디어교육 개시, △재난자막방송 가독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유료방송 가입변경, 재약정 문자고지 개선 홍보 등
- 또한, 적극행정의 대·내외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5건을 선정
- 자체 경진대회 입상성적 및 외부수상실적 등을 반영하여 우수 공무원 10인 및 우수부서 2개 선발·포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직사회 세대교체를 반영, 워라벨 제고, 국정가치 교육 및 적극 행정을 원활히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교육효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통계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정부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환류로서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가 우수 ■ 성과지표로서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등은 최근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지표로서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5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 관계부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점에서 우수 ■ 자율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효율적 근무 문화 정착을 노력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외훈련 교육결과·과정 등 훈련성과를 공유하여 국정가치 실천을 위한 성과지표를 충실히 달성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100% 달성 ■ 전년실적 대비 대폭 상회하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들이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복무관리가 우수
계(100점)			81	
가점			0	
합계			8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메시지 확산노력) 방송매체 출연,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한 방통위 중점 주요정책방향 설명 및 현장 소통 적극 추진
 - 「20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계획 수립」(5월), 「온라인 피해 365센터」 이용 및 활용방법 대국민 홍보(5월~), 구글 등 앱마켓 사실조사 착수(8월~) 등 방통위 추진 주요정책 홍보
 - 「2022 방송대상 시상식」(6월), 장애인 미디어 축제(10월), 국제 OTT 포럼 개최(11월) 등 방통위 주요행사에 대한 국내·외 긍정적 언론보도를 위한 소통 강화
- (홍보지원 체계 마련)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소통기획회의(매월), 빅데이터 분석 도입, 외신 담당관 지정(6월~), 영문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 제작(16회) 등 체계적 홍보 지원체계 마련
 - 객관적·전문적 시각의 정책홍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홍보 방향 논의를 위한 민간 홍보자문단* 운영(분기별 개최) 실시
 - * 방송통신정책 관련 외부 홍보전문가 6인으로 구성(운영기간 : '22.6월~12월)
- (국민불편 해소 적극 홍보) 국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추진한 국민불편해소사례(17건) 정책자료집 발간·배포(12월)
 - ※ 애플 구독앱 해지절차 개선(1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개선(5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해지절차 개선(9월), 불법스팸문자 차단방법 개선(10월)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인 정책홍보 활성화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국민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송출연, 언론브리핑 등 언론소통 강화를 통한 홍보강화와 다양한 현장 소통 확대 필요

(2)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만족도 개선을 위해 “국민 불편 해소” 사례 등을 기획홍보 하는 등 계획을 충실히 수립 ■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산출결과는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산식 개선 및 근거가 제시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에 적합하게 각 시기별 일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계획도 원활히 이행 ■ 국민·언론 관심이 높은 주요 이슈에 대해 정책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타 부처·타 부서와의 홍보 협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 ■ 대통령 선거, 감사원 감사 등 방통위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언론 정책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6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대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활성화 및 정책소통 만족도를 달성할 예정임 ■ 전년도 정책소통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전적 성과지표 설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각종 오보 및 이슈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기관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계(100점)			83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8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정책의 체계적 소통 추진) 연간 디지털 소통 종합계획 및 주·월간 제작 스케줄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디지털 소통 추진
 - '22년 연두 업무계획 및 과·팀장 업무보고의 주요 정책에서 핵심 홍보 과제와 메시지를 선별, 종합적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 (위원회 주요정책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방송통신 주요 정책을 재미있고 쉬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원회의 친근한 이미지 부각
 - 개국시기에 맞춰 공동체라디오 및 미디어나눔버스·미디어온 등 계기별 홍보 콘텐츠 제작
- (국민불편해소 콘텐츠 기획·제작)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형 국민불편해소 시리즈 제작
-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기획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증대와 채널 이용자 유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간결한 뉴스 및 흥미·재미 위주의 콘텐츠 제작
 - 위원회 주요 동정·정책을 숏폼 뉴스 등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주요정책 핵심 메시지와 정책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모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연두업무계획, 과·팀장 업무 보고 등을 통한 핵심 홍보 과제와 메시지를 선별하는 등 종합적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 국민참여 콘텐츠 제작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소개하고 경험하는 콘텐츠 제작 독려 ■ 유튜브·페이스북의 구독자 수 등 정량적 지표를 성과 지표로 병행설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성과지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전환기·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총 14개 추진일정 달성 ■ 현장 의견을 수렴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 콘텐츠 제작 및 국토부·교육부 등과 부처협업 캠페인·콘텐츠 제작 추진 ■ 미디온·미디어 나눔 버스 등 국정과제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오보관련 정정카드뉴스 신속 제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4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대비 국민참여 콘텐츠(158%), 유튜브(110%) 등 목표 초과달성 ■ 국민 참여 콘텐츠 목표를 전전대비 10% 향상시킨 132건으로 선정 ■ 적극적인 정책 확산을 위한 SNS 채널 구독자를 전년대비 10%이상 상향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격차해소 캠페인(조회수 10만회, 댓글 288개, 기사 10여건), 국민불편해소 시리즈(긍정 댓글 111개, 보도 9개 매체) 등 긍정적 반응확산 ■ 미디온 홍보 추진 이후 '미디온' 이용자 14% 증가 및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카드뉴스로 건강한 온라인 공간 구축 기반 마련
계(100점)			92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국가 간 양자면담 및 국제기구 자문관 활동, 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정부기관 : 태국,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가나,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등의 정부 관계자와 협력 강화
 - 방송통신 기관 : 구글, 메타, 국제 정보기술 산업협회 등 방송통신 기관과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캐나다, 터키 등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 지속 추진 및 '22년 제작 지원 대상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제작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의식,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및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조사연구 실시
 -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 개최 하여 통일에 대한 관점 공유 및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정치적이고 객관적 측면에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역할 모색
 - '나의 살던 고향은', '통일, 미래로 가는 길' 등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방송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남북 교류협력 추진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의견반영 등을 시행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 개선 보완·필요 사항

-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고려한, 대면·비대면행사 적극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규제기관 조사 및 주요 정책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외협력 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관련사업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국제협력 업무 성과 측정을 위하여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와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의 합산을 통한 성과 지표 마련 ■ 남북 관련 3개 사업을 모두 지표에 포함하기 위해 각 항목 별 가중치를 부여한 통합 성과지표 마련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7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 ■ 남북 교추위(법정위원회)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의 회의를 통해 방송관계자, 전문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견을 수렴 후 정책반영에 노력하였고,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와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사업도 참가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동향 간담회 개최 등 정책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 ■ 직접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의 통일 의식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환경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위해 노력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3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성과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국제협력만족도와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목표 달성 ■ 정책고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 목표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6		
정책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 콘텐츠 활성화 및 창작의욕 등을 고취하였고, 북한 방송통신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해 요약자료집,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여 활용성 및 국민들의 통일 의식 제고
계(100점)			84	
가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합계			86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정책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전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체계화 및 전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 계획」 수립·발표(~12월)로 전 국민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 - 아울러, 생애주기별 교육목표·역량·교안·교수법 개발 및 수준·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확립(연중)하고, -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미디어온)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계획
5.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조건 이행 점검 외 사업자 자율이행 유도방안 보완 필요 - 방통위의 허가조건 이행점검 외 사업자 자율 이행점검 기회 부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조건의 주요내용, 이행시기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 승인 등을 통해 허가 조건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상시) ○ 향후 허가조건 이행 점검 전에,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음 ('23.상반기 중)
9.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성과지표에 시장지표 반영 필요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활동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유통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3월) - '21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개선(온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 '온라인 모니터링+정책제도개선+상시조사'를 포괄하여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로 개선)하였으나, 시장 개선 지표가 보다 폭넓게 반영되도록 개선 * 과년도 대비 도전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제시 ○ 단말기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약진하는 알뜰폰 시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성지점 중심의 이동통신단말기 시장 집중 점검·단속 활동 강화,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유통점 불법행위 관리 강화 등 유통시장 개선 활동 적극 추진(연중)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각 사업 효과성 측정지표 보완 필요 - 정책 활동 수혜자 입장을 반영한 성과지표(정량, 정성)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팩트체크 결과물(건)'에서 팩트체크 시민교육 수료율로 변경('23.3월) - 팩트체크 플랫폼 상 콘텐츠 건수는 공급자 중심의 지표로, 정책수혜자 입장에서의 성과 지표는 '온라인 상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감소량' 등이 적절하나, 위 지표는 현실적으로 측정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아닌 노인·청소년·아동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판별력을 제고하는 팩트체크 시민 교육과 관련된 지표로 대체 - 팩트체크 시민교육에 대한 효과성 측정지표의 경우, 단순 교육 개최 횟수 등 공급자 중심의 투입 지표가 아닌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한 지표인 '교육 수료율'로 설정 - 팩트체크 시민교육은 무료 교육으로, 일반적인 무료교육의 경우 내용 불만족 등으로 중간 이탈자가 다수 발생하는 바, 교육 수료율은 수강생의 교육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함
13.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 노력 필요 - 다매체 환경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에 노력하고 이를 성과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 가시청가구 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개선 여부 검토 및 개정안 마련(12월) - 디지털 중계권 법적 개념 등 관련 정책연구 과제 추진('23.12월까지) -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관련 정책 개선 연구 과제 추진('23.12월까지)
17.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예산, 조직 등) 확대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 및 결과를 성과에 반영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예산, 조직 등) 확대 지속 추진(연중) - 기재부, 국회 예산 심의 대응 등 예산 확대 추진 - 신규 성과지표 개발 검토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홍보 지속

□ 지원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p>4.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p>	<p>○ 공직사회 세대교체를 반영, 워라벨 제고, 국정가치 교육 및 적극행정을 원활히 추진</p>	<p>○ (근무문화 혁신) 공직사회 세대교체를 반영,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 최근 5년간 각종 관련 지표가 현저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본부 조직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20년에는13위, '21년에는 11위로 적게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순위 ※ 2018년 대비 2022년 34.2%(9.38h→5.9h) 감축 - 유연근무(12일이상 활용직원 비율)활용률의 경우에도 5년전 대비 22.1p% 증가(목표 100% 초과달성) <p>○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특히, 2020년 자체 평가위원회의 공직문화 조성에 차별화된 성과 지표 개발 필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활용에 대한 구성원 인식전환 및 4급이상 직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기 설정(21.4.26.)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table border="1" data-bbox="815 1039 1431 1294"> <caption>☞ 최근 5년간 '근무혁신 지표'의 지속적 상향</caption> <thead> <tr> <th>관련지표</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r> </thead> <tbody> <tr> <td>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td> <td>-</td> <td>-</td> <td>-</td> <td>138일 76.2%</td> <td>15(일) 88.6%</td> </tr> <tr> <td>초과근무 감축률</td> <td>26.1% (9.38h)</td> <td>5.6% (8.8h)</td> <td>3.5% (9.0h)</td> <td>23.3% (6.9h)</td> <td>14.7% (5.9h)</td> </tr> <tr> <td>연가 사용</td> <td>14.01 (일)</td> <td>15.5 (일)</td> <td>14.13 (일)</td> <td>15.0 (일)</td> <td>15.68 (일)</td> </tr> <tr> <td>유연근무 활용률</td> <td>73.5%</td> <td>73.7%</td> <td>82.3%</td> <td>84.9%</td> <td>95.6%</td> </tr> </tbody> </table> <p>○ (국정가치 교육) 현행 성과지표의 하나인 국정 과제 교육이수 실적은(연간 21시간) 공직자 교육 훈련의 핵심적인 지표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청렴, 4차 산업혁명 등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및 직무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표임 - '22년 실적은 21.04시간으로 계획대비 초과 달성 하였으며 이는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상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교육이수시간(9.6시간) 대비 12.44시간 많은 수준 <table border="1" data-bbox="815 1756 1431 1883"> <caption>☞ 최근 5년간* 국정과제 교육이수 실적의 지속적 상향 (15→21시간)</caption> <tbody> <tr> <td>*18년(15시간)→19년(16시간)→20년(18시간)→21년 (20.1시간)→22년(21시간)</td> </tr> </tbody> </table> <p>○ (적극행정) 2022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적극행정 총 21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p>	관련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	-	-	138일 76.2%	15(일) 88.6%	초과근무 감축률	26.1% (9.38h)	5.6% (8.8h)	3.5% (9.0h)	23.3% (6.9h)	14.7% (5.9h)	연가 사용	14.01 (일)	15.5 (일)	14.13 (일)	15.0 (일)	15.68 (일)	유연근무 활용률	73.5%	73.7%	82.3%	84.9%	95.6%	*18년(15시간)→19년(16시간)→20년(18시간)→21년 (20.1시간)→22년(21시간)
관련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간부직 근무혁신 실천율	-	-	-	138일 76.2%	15(일) 88.6%																												
초과근무 감축률	26.1% (9.38h)	5.6% (8.8h)	3.5% (9.0h)	23.3% (6.9h)	14.7% (5.9h)																												
연가 사용	14.01 (일)	15.5 (일)	14.13 (일)	15.0 (일)	15.68 (일)																												
유연근무 활용률	73.5%	73.7%	82.3%	84.9%	95.6%																												
*18년(15시간)→19년(16시간)→20년(18시간)→21년 (20.1시간)→22년(21시간)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p>방통위 내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0인을 선발·포상(지표 100% 달성)</p> <p>○ (향후계획)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지표(3개)는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일·생활 균형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었다는 판단 및 수치상으로 내년도에 더 이상 지표를 목표 상향하여 운영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관리중인 지표의 계속 활용보다는 국정 가치를 실현하고 조직구성원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예정</p>
<p>5. 대국민·대 언론 정책소통 강화</p>	<p>○ 성과지표인 정책홍보 활성화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p>	<p>○ 국민에게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기획 홍보 추진(연중)</p> <p>○ 방통위 주요정책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 배포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 확대 독려(연중)</p> <p>- 주요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정정(오보대응)에 정확성과 신속성 적극 제고(연중)</p> <p>○ 22년도 대언론(출입기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추진(연중) 하고 보도자료의 신속도 및 충실도 제고(분기별)</p>
<p>7.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p>	<p>○ 남북 교류협력 추진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의견반영 등을 시행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p>	<p>○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연중)</p> <p>- "2023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통해 청년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및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환류, 차년도 컨퍼런스 개최 시 반영 추진</p> <p>- 비정치적인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 등에 대한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환류, 차년도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추진 시 반영 추진</p> <p>- 학계 등 민간에서의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북한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홍보자료 배포 추진</p>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사회 세대교체를 반영, 국정 가치 교육 및 적극행정을 원활히 추진, 워라벨 제고를 위한 성과 지표 개발 필요	
5. 대국민·대 언론 정책소통 강화	○ 성과지표인 정책홍보 활성화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민에게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 홍보 추진(연중) ○ 방통위 주요정책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 배포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 확대 독려(연중) - 주요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정정(오보대응)에 정확성과 신속성 적극 제고(연중) ○ 22년도 대언론(출입기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추진(연중)하고 보도자료의 신속도 및 충실도 제고(분기별)
7.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남북 교류협력 추진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의 견반영 등을 시행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붙임] 2022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핵심기능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강화 ■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	---------------------

전략목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	-----------------------------------	--	---

성과목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	-----------------------------	-----------------------------	---------------------

성과목표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	--------------------------	-----------------------	----------------------------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성과지표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건수 >

- 개념 : 방송법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및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를 합하여 산출
- 조사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대상 : 지상파, 종편·보도PP의 방송프로그램
- 조사방법 : 방송프로그램 방송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의 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처분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처분
- 측정산식 :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방송법 제4조제2항, 3항, 4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22년 측정결과

- 2022년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4건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음
- 지상파 3건, 종편PP 1건으로 '21년 12건에 비해 8건 감소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건수> (단위 : 건)



□ 성과분석

- '17년~'20년은 방송의 공정성 위반 건수가 증가했으나 '21년부터 감소
 - ※ '17년 5건, '18년 12건, '19년 14건, '20년 23건, '21년 12건, '22년 4건

< 방송의 공정성 관련 매체별 심의제재 현황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 상 파	종 편	보 도															
주의	1	4		3	4	2	5	2		7	12		7	2		3	1	-
경고				1	1		1		1	1	1		3			-	-	-
관계자징계				1			2		1	2						-	-	-
과징금							2									-	-	-
소계	1	4		5	5	2	10	2	2	10	13		10	2		3	1	-
총계	5			12			14			23			12			4		

- 종편·보도PP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 종편·보도PP의 경우 '18년 7건에 불과했던 공정성 제재건수가 '20년 13건으로 늘어나 방송사 구성원들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21년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노력을 통해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건수가 대폭 감소('20년 13건 => '22년 1건*)
- *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 방송의 자유와 독립, 건강한 미디어발전을 위한 방통위 조치 >

-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등이 법 개정예 반영되도록 국회 논의 지원
- 편성위원회 운영 정착
 - 지상파방송과 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 점검('20.9월)을 통해 노사 공동참여, 정기적 개최 등 편성위원회 운영 정상화

< 편성위원회 운영 관련 재허가 조건 >

- ①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KBS·MBC·지역MBC)
- ②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를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운영(MBC·대전MBC)

- KBS 및 MBC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였으며, 방송3사는 편성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보도·편성 등 사내 현안 논의

< 편성규약 개정 주요내용 >

- KBS('19.10.22. 의결·'19.11.1 시행)
 - ① 국장 임명동의제, 방송총국별 지역 편성위원회 신설
 - ② 단체협약 실효 시 전체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등
- MBC('18.6월 개정)
 - ① 회사·종사자 각 5인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 ② 편성위원회 개최 규정 개선(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하에 미개최 가능,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회의 개최)
 - ③ 회의 결과를 사보와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지
 - ④ 편성위원회를 편성규약에 규정하여 단체협약과 분리(단체협약 실효시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 ⑤ 편성위원회를 통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자문 근거 마련

< 편성위원회 운영 횟수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KBS	4	10	9	7	3
MBC	0	0	2	2	3
SBS	1	2	1	2	1
합 계	5	13	12	11	7

- 종편·보도PP도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구성, 정기적 편성위원회 개최 등으로 제작 자율성 제고

방송사명	편성위원회 구성현황	편성위원회 개최실적
TV조선	총 12인(사측 6인, 실무자측 6인)	2017~2022년 : 매년 4회
JTBC	총 8인(사측 4명, 실무자측 4명)	2017~2022년 : 매년 4회
채널A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2017~2022년 : 매년 8회
MBN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2017~2020년 : 매년 4회 2021~2022년 : 매년 6회
연합뉴스TV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편성위원회 역할 수행	2017~2018년 : 매년 4회 / 2019년 : 7회 / 2020년 : 8회 / 2021년 : 4회 / 2022년 : 3회
YTN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편성위원회 역할 수행	2017년 : 2회 / 2018년 : 0회 / 2019년 : 7회 / 2020년 : 4회 / 2021년 : 9회 / 2022년 : 3회

■ 종편 재승인 조건 부가를 통한 불공정 방송 대폭 감소

- '17년 종편PP(TV조선, JTBC, 채널A, MBN) 재승인 심사('17.2월, 11월) 시 오보·막말·편파 관련 심의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
- 기존 22개('15), 17개('16)를 기록하던 제재건수가 4개('17, '19), 7개('18)로 대폭 감소
- '20년 종편PP 재승인 심사('20.4월, 11월)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준수',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
- '20년 13건에 달하던 심의 제재건수가 2개('21), 1개('22)로 급감

□ 향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3년 ~ 2027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2	'23	'24	'25	'26	'27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4	15	18	12	12	12	'23년은 최근 5년 실적치의 평균값(+2)로 설정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 '23년 목표치는 최근 5년('18 ~ '22년) 실적치의 평균(+2)인 15개로 설정하였고, 선거가 있는 해인 '24년(국회의원)의 경우 공정성 제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전년보다 3건 많은 제재건수를 설정하였으며, 기타년도는 3개를 축소하여 12개로 설정

○ 전략목표 성과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 지원

*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현재 1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과방위(22.12.2.)를 통과하여 논의 진행 중임

나.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엄격하게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성 보장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제고 유도

- 지상파방송사(34개사) 재허가 실시 ('23.12월)
 -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지역MBC(13개, 포항, 춘천, 제주, 전주, 원주, 울산, 여수, 안동, 목포, 대구, 광주, 충북, 강원영동), 지역민방(7개, 티비씨, 청주, 지원, 제주, 전주, 울산, 광주), 라디오(11개, YTN라디오, 경인, 국악, 원음, 불교, 기독교, 극동, 가톨릭평화, 국제방송, 부산영어, 광주영어)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종편PP 재승인 심사 추진
 - '23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PP 사업자(TV조선·MBN)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 추진
 - ※ 종편PP 유효기간 : TV조선(~'23.4.21), MBN(~'23.11.30)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실시 ('23.1 ~ 10월)
 - **(지상파방송 부과 조건)**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난청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내용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 등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실시 ('23.2 ~ 11월)
 - **(종편PP 부과 조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준수,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 유지, 전문 외부 기관에 의한 공정성 진단 실시
 - **(보도PP 부과 조건)**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 작성 후 방통위 제출

2.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

□ **성과지표 개요**

〈 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 〉

- 개념 : 통신·인터넷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한 이용자 보호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대상 :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 조사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 측정산식 :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 상 제재건수 집계

□ **'22년 측정결과**

-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총 8건의 제재 처분

의결일자	대상	위반법령	제재사유	제재내역
'22.12.27.	대리점(4개) 및 판매점(10개)	단말기유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원금 지급 ○ 사전승낙서 미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태료 부과 : 총 4,860만원
'22.12.7	7개사 (인터넷 신문사)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문사(7개사) ○ 행정지도
'22.9.14.	엠투엠글로벌(주), (주)비에스아이티, (주)퀀텟시스템즈, (주)태성아이엔씨	위치정보법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사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투엠글로벌(주), (주)퀀텟시스템즈 : 300만원 - (주)비에스아이티, (주)태성아이엔씨 : 360만원
	(주)아레나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 180만원
'22.8.26.	대리점(3개) 및 판매점(7개)	단말기유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원금 지급 ○ 사전승낙서 미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태료 부과 : 총 3,900만원

의결일자	대상	위반법령	제재사유	제재내역
'22.7.6	20개사(인터넷 신문사)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문사(20개사) ○ 행정지도
'22.7.6	21개 통신사 제휴 유료부가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절차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3사/서비스제공사업자 ○ 시정권고
'22.6.15.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전기통신사업법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 결합판매 시 제공한 경품을 이용자 간에 차별적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 : 4,968백만원 - LGU+ : 3,635백만원 - SKB : 1,093백만원 - SKT : 632백만원 - LG헬로비전 : 108백만원 - 딜라이브 : 49.4백만원 - KT스카이라이프 : 793백만원
'22.1.5	애플, 모바일앱 개발자(11개사)	전기통신사업법	애플 앱마켓 및 모바일 앱 개발자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모바일앱 개발자(11개사) ○ 시정권고

□ 성과분석

< 전기통신사업법 상 제재처분 >

-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조사)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사실조사 실시('21.4.21.~'22.4.20.)
 - ※ 조사대상 :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및 해당 사업자의 유통점
 - ※ 조사방법 : 조사대상 사업자의 가입자 현황자료 분석 및 전국 유통점 자료 채증을 통해 경품 제공내역 확보 및 이용자 차별 분석(경품고시에 따라 결합유형·가입유형·가입창구·지역별 등 차별 여부와 정도 분석)
-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 부과('22.6.15.)

-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점검결과)**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후 애플 및 앱개발사에게 앱내 해지기능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22.1.5)
 - ※ 점검대상 : 애플(앱스토어) / 음악 앱(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바이브, 카카오뮤직, 유튜브뮤직), 도서 앱(밀리의서재, 윌라오디오북), 동영상(유튜브, 왓챠, 티빙, 웨이브)
 - ※ 실태점검 중 티빙은 해지링크를 제공하는 개선조치 완료, 애플은 모바일 앱 내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21.9월)
-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점검결과)**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가 인지한지 못한 채 가입·결제되는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21.9월~'22.2월)후 시정권고('22.7.6)
 - ※ 점검대상: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
 - ※ 점검내용: 가입단계 유료정보 표기, 가입후 고지사항, 해지환불 절차 등
 - *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완료(6월)

< 단말기유통법 상 제재처분 >

- **(상시조사체계 구축)** 최근 유통현장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행위로 선량한 유통점이 피해를 입고 있어 '22년부터 「상시시장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적시에 단속(연중)
 - '성지점'의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사실조사 실시 중('22.6월~)
 - 민원신고 유통점 등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사실조사 실시 및 위반 유통점 과태료 부과('22.8월, 10개 유통점 3,900만원)
 - 민원신고 유통점 등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사실조사 실시 및 위반 유통점 과태료 부과('22.12월, 14개 유통점 4,860만원)

< 성지점 이란? >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 게시글을 올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유통점

<p>▲ 네이버(카페)</p>	<p>▲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p>	<p>▲ 뽀뽀(구입개통수령 포럼)</p>

< 위치정보법 상 제재처분 >

- (위치정보사업법 실태점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여부 점검 실시

* 조정식 의원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미흡..." 지적 등('20년 국감)

- 위반행위가 발견된 사업자 5곳에 대해 총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 향후 추진계획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성있는 점검·조사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통신시장 투명성 제고
-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 통신서비스의 복잡·다양화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사례 증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앱 마켓에서의 부당행위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분야별 특성에 따른 신유형 부당행위 사례 발굴 등 통신시장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통신시장 생태계 조성
 -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보도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 주요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위치정보법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보호 환경 조성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3년 ~ 2027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2	'23	'24	'25	'26	'27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8	8	9	10	10	10	과거 실적(평균치) 및 추세와 '22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7년에 10건을 목표로 설정 ※ '20년 6건, '21년 10건, '22년 8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법, 위치정보법 상 제재 건수 집계	심결서

3.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성과지표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 개념 : 연도별 방송사업 시장 규모 추이를 분석하여 방송시장 공정환경 조성 등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 측정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사대상 : 2021년 기준 방통위·과기부 등록 방송사업자(총 422개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각 방송사업자 제출자료 집계)
- 측정산식 : 2021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 **'22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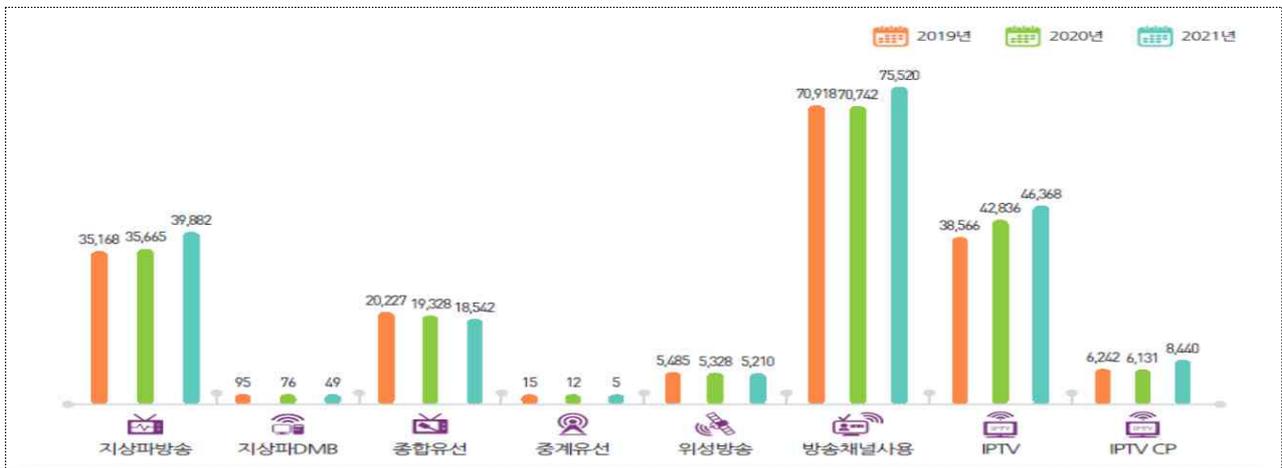
- '22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는 19조 4,016억원으로 전년(18조원) 대비 7.7% 성장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구매 활성화,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등으로 인해 방송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면서 방송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며, 당초 목표치(18.4조원) 대비 초과 달성(목표 대비 약 105.4%)

〈 방송사업 매출 현황 〉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17조 6,717억원	18조 118억원	19조 4,016억원	1조 3,898억원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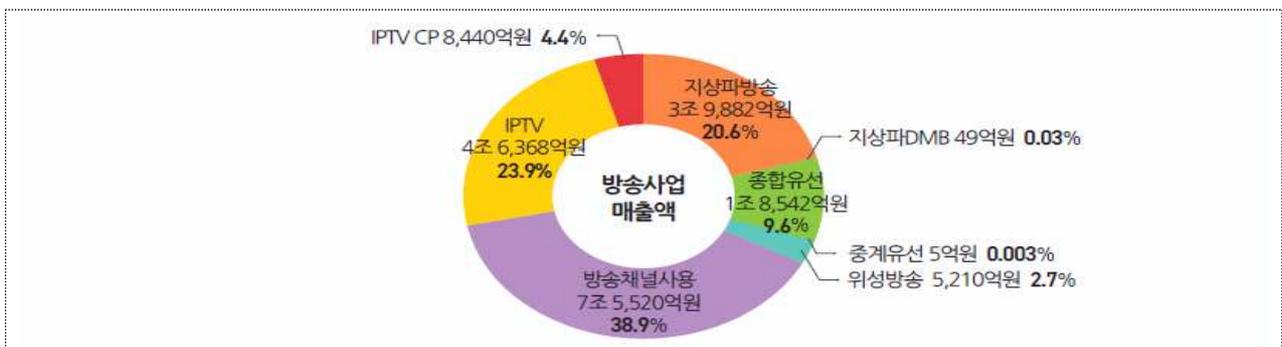
-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 변동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지상파(DMB 포함)는 11.7% 증가하여 약 4조원, IPTV는 8.2% 증가하여 약 4.6조원
- 매체 간 경쟁심화 및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의 방송사업매출은 전년대비 각각 4.1%, 2.2% 감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 CP는 전년 대비 각각 6.8%, 37.7% 증가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



- '21년도의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을 보면, 지상파 방송(DMB 포함)의 점유율은 20.6%로 '20년 대비 0.76% 증가
- 종합유선방송의 점유율은 '09년 19.9%에서 '21년 9.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PTV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5년 12.5%에서 '20년 23.9%로 점유율 확대

< '21년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



□ 성과분석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구매 활성화,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등 환경변화, 정책영향 등으로 인해 방송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조 3,898억원 (7.7%) 증가 → 당초 계획한 목표의 105.4% 달성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상향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특히, 이태원 사고 관련 잔혹 혐오 영상 등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10.31.)
 - * 이태원 사고 관련 심의 요청 민원 350건 접수(방송 103, 통신 247) 및 방송심의 20건(권고3, 의견제시2, 문제없음15), 통신심의 949건 처리(삭제725, 접속차단224) (12.16기준)
- (방송의 품격 제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 고지 등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추진(63개 채널, 26,276회 송출)
- (우수 프로그램 시상)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등 사회·문화발전, 한류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22.6월, 15점)을 통해 방송 제작인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보편적 시청권 개선)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언론·문화·시청자·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개최(4회)하여 제도개선 등 논의
 -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임기 만료로 제8기 위원을 신규 위촉('22.10.4, 임기 : '22.10.8~'24.10.7)하고, 제8기 보편위 1차 회의('22.11.22) 및 2차 회의('22.12.20.)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현황과 주요이슈 및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논의,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 여부' 심의

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방송법·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공유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시행(3회 3.17, 6.23, 10.13)
- (이용자 권익보호) 유료방송(IP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 상품내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의도치 않은 가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요금 등)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하는 내용의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실시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52개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 및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6.14)
- (연계편성 현황 분석) 지상파·중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편성현황 분석·공표 및 조치방안 마련(9.28)
- (금지행위 사실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EBS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결(2.23)
 - (주)딜라이브 등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위원회 의결(6.29)
 - (주)티비씨 등 20개 방송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사실조사(6.21 결과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결(11.16)
- (방송분쟁 조정) 방송시장 매출 정체 등으로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와 지상파 및 콘텐츠사업자 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조정 및 합의 권고를 통해 분쟁 해결(연중)

③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방송광고제도 개선) 열거된 7가지* 광고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추진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협의체」 운영(6월~11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방안 마련

- (외주 거래 가이드라인) 지상파·종편PP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 이행 실적 점검(7월, 12월) 및 가이드라인 재검토* 완료(7월)

* 외주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년간 재연장

- (외주제작 실태조사) 방송사-외주사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배분 등 계약 및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7~12월, 문체부 공동)

※ 표준계약서 활용률 '20년 98.3% → '21년 98.5%

서면계약서 사용률 '20년 98.8% → '21년 99.4%

- (편성규제 완화)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 완화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시행('22.1월)

-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22.1월)

- 방송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편성규제 개선방안 마련('22.12월)

- (공영방송 ESG경영 방송평가 도입) 공영방송 ESG 평가기준 도입을 위해 전문가 검토(8월~10월) 및 사업자 의견을 수렴(KBS, EBS / 10.11, 10.28.)하여 통해 평가규칙 개선안 마련(22.12)
- (공적채널 콘텐츠 공적역할 평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확대하여 공적 채널의 공익성·공적역할 등 공적 기능에 대한 평가 시행방안 마련(22.12)
 - 공적채널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7.22, 8.30, 9.27. 3회), 대상 사업자 의견수렴(10.31)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등 평가방안을 마련
-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일환으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11.16.),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 (국제 OTT 포럼)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외 업계·학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OTT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 개최(11.16)
 - (해외 시장 조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p>□ 해외 OTT 시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국가 : 중국, 멕시코, 브라질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병행 ○ 조사대상 : 전문가 및 일반인(국가별 각 4인)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대상국의 산업 및 규제 현황 등 - (일반인) OTT 이용에 관한 인식, 주요 OTT 플랫폼의 UX/UI 선호 등 	<p>□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국가 :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15-54세 남녀 유료 OTT 이용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도네시아</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샘플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16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K-콘텐츠 이용자(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144명(57%)</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8명(87%)</td> <td style="text-align: center;">864명(8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OTT이용현황, 유료지불현황 등 	구분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샘플 수	전체	2,010명	1,516명	1,010명	K-콘텐츠 이용자(비율)	1,144명(57%)	1,318명(87%)	864명(86%)
구분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샘플 수	전체	2,010명	1,516명	1,010명											
	K-콘텐츠 이용자(비율)	1,144명(57%)	1,318명(87%)	864명(86%)											

- (정책연구)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진출 방향성과 가능성을 분석하여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참고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9~12월)
- o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22년 신규 예산 확보(3.5억원)

4]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o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52사에 방송광고 제작비 14.4억원, 소상공인 177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15.9억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 총 52개사(TV 34사, 라디오 18사)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도모
 - *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기술혁신기업, 우수 녹색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등
 - ** TV광고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 광고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비용부담 등으로 방송광고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 177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르고 지역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마련
 -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방송 광고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의 향후 5년 간(2023년 ~ 2027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26	'27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조원)	19.4	20.4	21.4	22.5	23.6	24.8	최근 3개년 '20~'22년 실적 (과년도 방송사업자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연평균 증가를 5% 적용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마련 예정
- (편성규제 개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편성규제 개선 방송법령 개정안 마련('23년)
- (방송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반기별) 및 방송분야 외주제작 실태조사(연중)
- (국내OTT 해외진출 지원) OTT 해외시장 및 이용자 콘텐츠 선호도 등 조사* · 분석, 국제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해외진출 지원('23년~)
- * 국내 OTT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공영방송 ESG경영 방송평가 도입) 중앙지상파TV(KBS, EBS, MBC, SBS) 및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대상 ESG 경영 항목 관련 방송평가 실시('24년~)
- (공적채널 콘텐츠 공적역할 평가) 공적채널 콘텐츠 평가방안 발표('23년), 공적채널 시범평가 실시('23년 방송분 평가, '24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식 평가 실시('25년~)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방송광고 마케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를 지원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원기업 성장 도모